

### ‘쇠고기 이력추적제’ 문제투성이

국내산 모든 쇠고기의 사육단계부터 유통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 율 하반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농림부 등 시행부처들의 홍보부족과 시스템상의 문제로 시범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 22일부터 소를 소유한 자는 출생·이동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농림부는 사업 시행을 위해 11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관련 예산은 귀표 구매비와 부착비, 이력관리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한 일부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까지 하다.

더욱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 3년 4월여 기간이 지났는데도 소비자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현실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실제 지난 2월 24일 경기 수원시 소재 A 대형마트의 축산담당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심하게 말해 현실적이지 못한 제도이다”라면서 “개체별 재고관리, 잔여육 처리, 스티커 관리가 어려워 개체별 고기가 섞이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인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판매장에 하루 한 마리의 소가 들어와 당일 모두 판매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2~3마리의 소가 함께 들어오에 따라 개체별로 고기를 분류하고 판매 후 한 개체에서 남는 소량의 부위가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특히 재고관리와 대면판매·소포장육 등에 부착하는 개체번호 풋말이나 스티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전담할 인력문제와 정부의 홍보부족 등의 문제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들 역시 “6개월~1년여 기간 동안 시범 운영을 했다가 이 같은 문제점 등으로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 서울우유 “동남아 가지”

국내 우유시장 정체로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서울우유가 해외에서 해법찾기에 나섰다. 서울우유는 국내 우유시장의 한계로 인해 남은 300에 달하는 잉여우유 해결을 위해 동남아지역에 유제품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중국,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에 멸균우유 수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몽골에 멸균우유를 수출해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이를 토대로 해외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우유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추가로 진출할 만한 블루오션도 마땅치 않아 해외수출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올해 긴축경영을 선언했으나 해외사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판단, 해외수출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 축산정책국은 '축산정책단' 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합의를 이룸에 따라 농림부도 농림수산식품부에 맞게 조직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조직개편안' 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월 22일 농림부에 따르면 새로 개편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2개의 실(본부)과 10개의 국(단), 44개의 과(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장관 아래 제1차관과 제2차관을 두고 제1차관 소관에는 기획조정실, 농업정책국, 농촌정책국, 국제농업국을, 제2차관 소관에는 식품산업본부와 수산정책실을 두고 있다. 식품산업본부에는 식량정책단과 유통정책단, 그리고 현재 축산정책국과 같은 축산정책단이 있으며, 축산정책단에는 축산정책팀, 축산경영팀, 자원순환팀, 축산물위생팀, 동물방역팀으로 5개팀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축산업이 갖는 특수성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이면서도 그러나 축소시키지 않고 현행을 유지한 데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전국축협조합장(축발합)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농림부를 비롯 관계요로에 축산정책국의 존치 내지는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 농진청 일단 존치로 현재 지위 유지

농촌진흥청이 일단 존치되고, 산림청은 당초와 달리 농수산식품부에 소속된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2월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6인 협상'을 열어, 농진청을 비롯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의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일단 확대 개편되는 농수산식품부의 외청으로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수 있게 됐다.

양당은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국토해양부에 두기로 했던 산림청을 농수산식품부의 소관으로,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에 소속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사실상 폐지하고, 통일부는 존치하는 동시에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해 존치하기로 합의했다.

## 지난해 원유생산량 오름세로 반등

최대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면서 200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던 전국의 원유생산량이 지난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최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원유생산량은 218만톤으로 전년대비 1만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물량은 원유생산량 폭등으로 유제품의 소비둔화로 수급불균형이 초래됐던 '02년 253만톤, '03년 236만톤, '04년 225만톤, '05년 222만톤, '06년 217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던 상황에서 '06년대비 1만톤 가량 증가한데 대해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또 이같은 원유증산은 국내원유생산량 가운데 상당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모유업체가 03년, 04년 두 차례에 걸쳐 쿼터증량과 헬퍼사업개선을 통한 신규농가가 늘어난데다 초과원유에 대한 연말 소급적용 등으로 생산의욕을 높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 농축산소식

그 외 메이저 유업체들도 소폭이긴 하지만 0.1%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원유생산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체의 공격형 생산과 느슨한 쿼터관리 에 따른 부작용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들은 또 소비 둔화, 원자재가 상승, 국제분유가상승 등 낙농산업의 대한 국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상황마저 기대에 미치지 않자 이를 우려하고 있다.

유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각 유업체별로 소폭이긴하나 전체생산량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큰 유업체들이 생산량이 늘어 원유수급안정화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일평균생산량이 5789톤으로 최근 3년간의 추세보다 가장 낮은 반면에 원유생산량은 첫 증가 추세로 나타나 굉장히 상징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쿼터매매시 20%가 귀속되는 진흥회의 경우 잉여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재정소요액이 감축됐지만 전국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 1조원 긴급수혈...담보가 관건

축산농가에 결국 사료구매자금 1조원이 긴급 수혈된다. 이에 따라 꺼져가는 축산농가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양돈·한우농가 등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사료 가격상승 부담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배합사료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1조4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한 것. 실제로 축산현장에서는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뛰는 사료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가 하면 도산위기에 놓

여 있는 농가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축산물가격은 떨어지고 있어 축산농가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는 1조원 지원이라는 긴급처방을 내놓음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여보도록 하고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사료외상구매자금 이자 연 12~24% 감감을 위해 연리 3%, 상환기간 1년 조건으로 1조원을 특별 지원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적용되는 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품목 외에 추가로 매니옥펠리트, 매니옥칩, 걸보리, 대두박, 아자박, 동식물성유지, 면실박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적용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3년 더 연장기로 했다.

인수위는 앞으로도 추가로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1천억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사료원료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책을 주도한 인수위 경제2분과 홍문표 위원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1조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놨지만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에서도 생산비를 줄이는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사료대책과 함께 유기질비료 지원물량을 금년도 계획 1백54만톤에서 2백만톤으로 늘리고, 구입비 보조율도 17%에서 30%로 확대하는 대책도 내놨다.

### 벽 없는 소 축사도 소유권 보존 등기 허용해야

등기소가 벽이 없는 소 축사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로 판단, 농가들이 금융기관 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축사를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소 사육농가 대부분은 축사를 지을 때 경제성과 적정 사육환경 유지를 위해 벽을 만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축사 표준설계도 역시 이런 점을 감안, 소 축사는 벽을 두지 않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노용우 우신동물병원장(충남 금산군 소재)은 “소는 방목으로도 사육이 가능할 만큼 질병에 강한 가축이어서 대부분 벽이 없는 개방형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다”며 “만일 소를 돼지나 닭처럼 밀폐형 축사에 가둬서 사육한다면 환기 및 습도 조절을 위한 첨단장비를 갖춰야 하는 등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사용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에서도 건축법상 적법하게 지어진 것이면 벽을 만들지 않은 축사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합법 건축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들이 신축 축사에 대해 행정기관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마쳤어도 등기소를 찾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게 된다.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현행 등기예규에 주벽(主壁)이 없는 축사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시돼 등기를 거부당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담보물로 인정해주지 않아 해당 농가들은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 경기도, 낙농산업 육성 128억원 지원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배합사료가격 인상과 열악한 노동환경, 환경분쟁 등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낙농 농가를 위해 경기도가 올해 128억원을 지원한다. 중점사항은 ▲생산성 향상 ▲축사환경개선 ▲우유소비 확대 ▲관광농업 등 128억원을 지원한다.

생산성 향상분야는 25억원을 투입해 등록, 심사, 검정, 정액공급, 개체관리기 등을 지원하는 젖소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해 산유량 증가 및 1등급 원유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축사환경개선분야는 65억원을 투입해 축사 주변조경을 통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와 환경개선제 지원을 통한 악취 및 해충제거 등을 추진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초수급생활자 및 차상위계층 등 불우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우유를 급식하는 우유소비 확대 분야에 32억원을 투입, 최근 정제 및 감소추세에 있는 우유소비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촌관광분야는 6억원을 투입하여 낙농체험목장을 확대 추진 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낙농체험목장 「Milk School」 사업은 2개소를 조성, 12천명의 체험객을 유치하여 1억5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린바 있으며, 주변의 슬로푸드마을 및 기존의 관광지와의 연계하여 활력 있는 농촌만들기와 농촌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